



‘문화도시’ 광주가 재현하는 공간의 담론정치

경합하고 굴절되는 도시 담론

노영은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류웅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Discourse Politics of Space Reproduced by ‘Cultural City’ Gwangju

Contending and Refracting Urban Discourse

Noh, Yeongeun*

(Ph.D. student,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Ryoo, Woongjae**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Gwangju, as a city where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ook place in 1980, occupies a special meaning in Korean modern history. The memories of citizens who resisted state power dur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became a part of locality, and Gwangju has been carrying out its cultural industry based on these uniqu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Gwangju has been promoting itself as a ‘cultural city’ through its cultural industry. This essay examined how Gwangju formed the ‘cultural city’ discourse through the cultural industry. Specifically, we tried to analyze how discourses of power, interests, and resistance are excluded, articulated and compromised through the local cultural industry. This was analyzed through Foucauldian discourse analysis.

Internally, diverse groups in Gwangju compete with each other to produce a particular discourse, but the city has also faced criticism from outside for the high level of regional cartel. This means that Gwangju is a place where discourses of various subjects compete and a space where powers converge to form discourses. In fact, Gwangju, which upholds democratic values, has been affected by the desires of capitalists and their political interests in implementing cultural industries. For example, the economic strategy for growth and the cultural strategy to sublimate painful memories sometimes created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In other words, Gwangju’s cultural industry has been refracted, competed, and compromised under the influence of local interests and pressur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looking at the formation process of discourse becomes an important issu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essay aims to reveal the process of reorganizing and

*duddms9714@naver.com

** wjryoo@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reproducing the region as a system of knowledge, that is, discourse, in which powers that compete and compromise in space. Especially,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the cultural industry of Gwangju, changes according to the social context and the influe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s can be seen as a task of tracking the changing discourse of the local cultural industry, which changes according to the power dynamics rather than being a mere cultural development project task alone.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views Gwangju as a contentious site where discourse is produced and interprets the process of discourse formation. In other words, this is a meaningful work because it reveals the process of reorganizing and reproducing a region as a system of knowledge or discourse, in which competing powers must compromise within a shared space.

Keywords: Gwangju, Culture Industry, Discourse, Cultural City, Space

국문초록

광주는 과거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도시로 한국 현대사에 있어 각별한 의미와 위상을 지니고 있다. 기령,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된 점을 들 수 있다. 동시에 무소불위의 군부독재에 저항한 시민들의 기억은 이후 지역성의 일부가 되었고 광주는 이러한 지역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 독창적인 문화산업을 수행해왔다. 특히, 광주는 일련의 문화산업을 통해 국가는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를 표방해왔다. 이 논문은 문화산업을 통해 광주가 ‘문화도시’ 담론을 형성해 온 과정과 궤적에 관해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와 관련된 시민들의 주체적인 목소리와 참여, 혹은 저항 담론이 권력과 이해관계, 지역 문화산업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배제, 접합, 절충되어 발현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미셸 푸코의 담론 이론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광주는 내부적으로는 여러 집단이 상호 경합하는 가운데 특정 담론을 생산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고하고 배타적인 지역 카르텔로 인해 내외부로부터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광주가 다양한 주체들의 담론이 경합하는 장소이자, 특정 담론의 형성 과정에서 크고 작은 권력들이 응집하고 수렴하면서 충돌하거나 쟁투하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관된 담론의 형성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인식론적·실천적 쟁점이 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도시 공간 내에서 경합하고 절충되는 권력들이 하나의 지식체계, 즉 담론으로 지역을 재편, 재구조화 혹은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되는 과정을 탐문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 광주, 문화산업, 담론, 문화도시, 공간

1. 세계 도시의 생산과 도시개발 담론, 광주

20세기 후반, 세계화의 조류와 함께 곳곳에 ‘세계 도시’들이 부상했다. ‘세계 도시’의 부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몇 가지 변화를 내포한다. 그것은 사물이나 산업 생산물을 넘어 공간과 공간 안의 삶 또한, 상품의 대상이 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국제 사회 안에서 국가 대신 도시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도시 간, 그리고 국가 간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과생된 효과¹⁾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도시의 차별화를 통해 자본과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선 일종의 전략이 요구되고 여기에서 활용된 것이 ‘문화산업’이라 할 수 있다. 문화산업은 영국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채택되어 활용되어왔고, 이후 일본과 한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확장된 개념의 문화산업 정책이 수행되어 왔다(Flew, 2019, p. 168). 그중에서도 한국은 광주, 전주, 경주 등의 도시를 ‘국제 문화 도시’로 전환하려는 문화산업 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들을 세계적 관광산업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문화산업은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상상되었다(Lee, 2007, pp. 335-336). 그러나 광주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은 산업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각각의 특수성과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과거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한 도시로, 한국 현대사에 있어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국가라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거대권력에 무자비한 탄압을 당한 경험과 그에 격렬하게 저항한 시민들의 집합적 기억은 ‘광주 정신’, 혹은 ‘지역 정체성’이라는 형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5.18의 기억은 평화, 통일, 인권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는 한편, 과거부터 언급되던 ‘예향’이라는 가치와 접합되어 지역의 특수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안영진 외, 2014, 229-244쪽). 이처럼 광주가 평화와 인권 등을 상징하는 도시로 여겨지면서, 광주에는 광주비엔날레 및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유치되었다.

다만, 이처럼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는 광주 또한, 문화산업의 실행에 있어 자본가들의 욕망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왔다. 이를테면 내부적으로 도시 성장을 꾀하려는 이들의 경제 전략과 신산한 역사적 기억을 승화시키려는 문화 전략은 종종 미묘한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었다. 동시에 광주는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세계화’란 흐름 안에서 ‘세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

1) 이와 관련하여 하비(Harvey)는 ‘사-공간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이란 개념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다. 사-공간 압축은 자본주의 아래 생활의 속도가 빨라지고, 공간의 장벽을 극복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세계가 개인에게 더 가깝게 접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력해 왔다(신혜란, 2022, 29-31쪽). 즉, 광주의 문화산업은 지역 내 이해관계와 중앙정부의 압력이 투영되면서 경합하고 굴절되는 가운데 절충되어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오늘날 광주를 중심으로 한국 내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산업이 부상하게 된 역사적이면서도 다층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계화란 시대적 조류를 중앙정부가 전유함으로써 관련 의제가 구체적 지역의 공간에 투영 및 이식되는 양상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국가가 활용한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가 지역에 전이 및 확산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혹은 주체들이 생성하는 담론들이 접합되거나 탈구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문하고자 한다. 이것은 권력의 지형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소거되는 지역의 문화산업과 관련한 담론의 변화를 조밀하게 추적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공간과 문화산업

1) 세계화 속 대안의 공간이 된 '로컬'과 한국의 문화산업

도시 문화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을 지닌다. 하지만, 문화산업이 경제적 성과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문화는 제거되고 산업적 논리만 남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촉진하고 지속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왔다. 최초로 공간을 구획 및 개발하던 과거에는 이를 통해 유토피아적 계획, 가령, 민주주의와 평등주의를 심화할 수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공간은 자본주의로부터 한 순간도 자유롭지 못했다. 공간의 경계를 정하고 나누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공간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상과 그렇게 할 수 없는 대상의 구분에 이용되었다. 근간에 우리는 국경을 넘어 도시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 사회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공간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의 다양한 공간들은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개방되었고 미디어에서 다채로운 방식으로 재현되기 시작했다. 즉, 공간은 한시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에게 열린 장소로 기능했고, 새로운 경험과 감상의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공간의 물리적 장벽이 해체되며 공간의 문제가 사라지기보다는 내밀하고 미묘해졌다. 사람들은 공간에 '무엇이 담겨있는가'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다(Harvey, 1990/1994, 356-358쪽). 확장된 공간 안에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새로운 상상과 욕망이 배태되었다. 가령, 그것은 기업가에게는 용이한 노동력 확보와 이윤 추구에 유리한

환경일 수 있고, 자본가들에게는 토지 소유와 확장의 문제일 수 있다. 나아가 정치의 차원에서 도시를 건축하고 공간을 재구성하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하비(Harvey, 2000/2001, 94쪽)는 자본주의가 특정 시기에 적절한 지리적 경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다고 진단한다. 과거 지리적 경관이 노동과 기업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현대에는 문화산업이라는 새로운 축적 형태가 등장했다.

또한, 이는 세계가 자본 축적에 있어 ‘균등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준다. 과거에 비해 경계가 없어진 공간은 자본의 흐름 안에서 상이한 발전 단계에 따라 누군가가 특정 지형을 더 쉽게 점유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배는 더 광범위해졌다. 동시에 자본축적의 세계성은 다중적 거점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것은 분산된 권력의 형태를 보여준다(Harvey, 1990/1994, 356-358쪽; Harvey, 2000/2001, 60쪽). 바꿔 말해, 이는 자본의 흐름에 따라 권력이 이동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사람들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공간에 담긴 것, 즉 공간의 특성과 공간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 이를테면 노동력, 자연, 문화 등에 천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간장벽의 소멸은 권력의 확장을 의미하는데, 가령 일국적 차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는 이제 국제적 차원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또한, 선진국의 초국적 기업 등이 주도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역설적으로 양극화와 빈곤, 무한경쟁, 권력독점, 환경파괴와 지구 온난화 등 위험사회의 현상과 단면을 수반했다. 이에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협력과 협동, 정의와 공존 등을 위한 사회 운동을 제안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사회 운동이 생성 및 교차하는 지점이 ‘로컬’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로컬은 세계화로 인해 파생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박규택·박경환·이명수·이상봉·하용삼, 2017, 70-71쪽). 세계화 시대에 등장한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세계 공간들보다 고정적이며 실제적인 장소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상상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로컬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현할 수도 있다. 지역은 실질적 연대가 가능한 공간으로 혁명의 근원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생성된 지역 사회의 분위기는 글로벌 사회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안적 전망²⁾을 제공하기도 한다.

2) 하나의 예로 지난 2020년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표방하며 대만, 한국, 독일, 아르헨티나의 도시에서 예술 전시를 선보였다. 프로젝트 이름은 “MaytoDay”로, 각 국가의 도시에서 민주주의의 감각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장소에서 전시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Park, 2020, 4, 7). 이는 과거에 행해졌던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이 도시 간 교류라는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러한 행위는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시적인 장소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이것은 이른바 ‘시공간 압축’이 가져온 새로운 가능성이자, 로컬에 대한 기대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세계화와 함께 등장한 단어인 글로컬(Glocal)이 암시하듯, 거시적 공간에서 일상의 작은 공간까지 세계와의 교류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다. 그러므로 '글로컬'이라는 단어를 통해 '글로벌'과 '로컬'의 공간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침투(interpenetration)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슨(Robertson)은 양자의 공존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모두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한다(김기홍, 2018, 1263-1264쪽). 로버트슨의 주장대로 끊임없이 교류되는 공간을 고정된 정체성으로 읽는 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세계화의 흐름과 더불어 각 국가의 문화와 지역 사회의 특성, 토착적 문화와 역사성을 중층적으로 읽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글로벌의 대척점으로서 지역이라는 범주에 간혀 로컬을 고정적으로 읽기보다, 창의적이며 새로운 인문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공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재편되어 온 궤적을 살필 수 있다. 도시가 재편되는 과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간이 이용되는 방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간 재편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려는 힘의 지형들, 그것이 가질 수 있는 함의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 속 담론이 축조되어 가는 과정, 공간이 개방되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 및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합리적'인 지식으로 담론화되어 지역에 적용되는지를 살피는 것은 유용한 작업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리적 경계가 있던 세계화로 인해 급격하게 개방된 공간에서 국가가 어떻게 지역을 통치하는지, 이 과정에서 '글로벌'과 '로컬'은 어떻게 담론화되어 다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이 담론들을 접합하는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전 지구적 문제가 된 양극화와 경쟁 과열, 권력 독점 등의 현상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 부문에 적극적으로 차용했는데, 이것은 심각한 양극화와 경쟁, 소외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공간도 예외는 아니었고 지역은 경쟁의 대상이자 경제적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상품이 되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예시는 비슷한 시기 문화산업이 정책적으로 도입되며 공간이 다루어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문화산업을 통해 공간을 효율적 방식으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2000년 전후로 '국제도시'가 육성되어야 한다는 담론이 빈번하게 등장해왔던 것은 그 사실을 반증한다. 한국은 국가적으로, 지역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가진 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며 지역 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왔다.

이 과정에서 로컬은 도구적, 기능적으로 다루어지고 단편적으로 이해되는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1990년대 문화산업이 정책적으로 도입되며 한류 콘텐츠의 개발과 지역 문화산업의 활성화가 장려되었다. 주목할 것은 앞서 언급했듯, 문화산업이 국가 및 지역 경제를 살릴 방편으로 대두되면서 성과주의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화산업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정작 문화산업이 적용될 지역에 대한 이해와 성찰의 과정, 정주민의 일상과 삶의 질이 주류 담론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근래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 주민 소외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생성되며 로컬이라는 공간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고려가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2) 문화산업과 스펙터클의 공간들

문화산업은 아도르노(Adorno)와 호르크하이머(Horkheimer)가 저술한 『계몽의 변증법』에 처음 등장한다. 『계몽의 변증법』에서 아도르노(Adorno)와 호르크하이머(Horkheimer)는 자본주의 논리 아래 대중문화가 동일화·동질화되는 현상에 대해 비판하며 문화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들은 문화산업의 상품을 내용 없는 반복적 생산물이며 이것은 대중의 사유를 마비시키는 도구가 된다고 보았다(Adorno & Horkheimer, 1947/2001, 185-193쪽). 그럼에도 현대사회에서 문화산업의 영향력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문화산업은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국가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몇몇 국가에서 문화산업은 ‘창조산업’이라는 용어로 변화하여 정책에 활용되었다(Hesmondhalgh & Pratt, 2005, pp. 4-5). 주목할 것은 문화산업이 정책에 활용되면서 굴절되거나 변화하는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간함(Garnham, 2005, p. 15)은 영국의 정책 담론 안에서 ‘문화산업’이 ‘창의 산업(creative industries)’으로 변화되는 경로를 추적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변화에는 정치적, 정책적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영국 정책에서 문화산업 대신 창조산업이 쓰이게 된 맥락은 정보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것이자, ‘창조적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정책에 포함될 수 있게 한 정치적 맥락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Garnham, 2005, pp. 19-20, p. 27). 여기서 하나의 예로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였으나,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도 문화산업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것은 지역 공간에 문화산업 정책이 도입되는 결과를 수반했는데 이는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문화에 있어 ‘미국화’라는 흐름에 대항하는 방안으로 인식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활용되었다(Hesmondhalgh & Pratt, 2005, pp. 4-5).

과거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소개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는 대중문화와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사이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문화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문화산업이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은 한국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은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1993-1998)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세계화를 선언하면서 세계 속 한국의 경쟁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

했다. 이후 한국의 문화산업 정책은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늘 화두에 오르는 의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관심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언급한 영국의 사례와 같이 한국 또한, 문화산업이 포함하는 영역, 문화산업의 가치 등이 시기 별로 상이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집권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먼저, 노무현 정부(2003-2008)는 시민단체와 정부, 기업 등 여러 주체가 협력하여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했고, 임기 후반에는 문화의 산업적 가치에 주목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2008-2013)는 지역 축제와 같은 콘텐츠를 통해 지역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주력했고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는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황설화, 2019, 71쪽, 81-83쪽). 위와 같은 상황들은 한국의 문화산업 정책이 약 5년간의 기간을 두고 질적으로 변화를 겪어왔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대통령 취임사부터 정책 보고서까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한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그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자주 논의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정부는 문화산업 분야를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언술을 종종 활용한다. 그리고 이는 문화기관과 같은 인프라(infrastructure)를 조성하고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경제적 축적에 대한 욕구가 인권이나 환경, 규제 등의 문제보다 더 중요시되면 문제가 발생한다(Harvey, 2000/2001, 121쪽). 실제로 한국의 문화산업은 지역에서 여러 방식으로 생성·지원되고 있으나 지역민과 지역성을 고려하지 못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³⁾ 따라서 도시공간의 개발에 있어 경제적·물질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제기된다(나운빈, 2018, 7쪽).

문화산업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유용성을 담지한다. 그러나 지역 문화산업에 있어 정주민이나 삶의 질보다 우선시되어온 것은, 국가 경쟁력, 혹은 경제적 이익이다. 때문에, 문화산업을 수행하는 정치가들은 경제적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책을 선호하는데, 이는 도시를 스펙터클⁴⁾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스펙터클적 공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민들의 소외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3) 한국의 문화관광도시는 지역경제에 일시적 활력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소량의 일자리 창출 효과만 얻을 수 있었고, 도시의 체계적인 변화는 어려움을 겪었다(나운빈, 2018, 7쪽).

4) 스펙터클은 시선과 의식을 집중시키는, 가시적이며 일종의 허위의식이 발현되는 장소를 의미한다(Debord, 1992/2014, 3쪽).

대중문화 대신 문화산업이란 개념을 제시했던 아도르노의 사유를 떠올리게 한다. 도시 안에서 경제적 논리에 따라 수행되는 문화적 실천들은 공간 자체를 물질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물신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산업에 관한 비판적 논의들은 우리의 삶과 현대 사회 자체를 성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Adorno & Horkheimer, 1947/2001, 62쪽)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일련의 사회적 현상들에 관해 논리적 법칙이 배타성을 띤다고 진단한다. 이는 사회에서 온당하다고 주장되는 논리, 즉 이성이 필요에 따라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한편, 일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 이외의 가치들을 도외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답론은 '합리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비정상'으로 만들거나 배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것은 문화산업 정책에 있어 기능적·도구적으로 지역을 활용하고 접근하는 근시안적 움직임을 떠오르게 한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인프라 형성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성공사례'로 불리는 도시 공간의 전경들이 도처에 획일적으로 형성되고 편재하게 되는 현상, 이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 집단의 목소리와 참여가 제한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물론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한 긍정적 사례도 존재한다. 한 예로, 스페인의 발바오는 산업화 이후 버려진 공장과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하였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설립과 도시 재건축, 문화 프로그램 시행은 발바오를 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켰고, 이는 도시의 부흥을 견인했다. 이것은 문화산업이 근대 산업을 대체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쇠퇴한 도시가 문화산업을 통해 재건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양윤서, 2017, 45쪽). 이와 같은 사례는 과거부터 '문화도시'를 표방했던 광주가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광주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정치적 격변과 저항, 민주화운동 등의 집체적 경험이 용해된 인문적 가치와 서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예술과 문화의 질료(質料)이자 콘텐츠로 승화될 수 있고 실제로 광주는 이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영향력, 지역 자본과 엘리트의 권력 및 개입으로, 광주의 인문적 가치들, 예컨대 인권, 민주주의, 평화 등은 만개(滿開)하지 못하거나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일면을 지닌다.

이러한 괴리는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민이 공간을 능동적으로 활용 및 전유한다고 여기게 할 수 있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와 전유라기보다 일시적인 느낌이나 감상에 머물거나 더 심각하게는 주민 소외나 배제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공간 외부에 그어진 경계는 사라졌지만, 이에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대상은 자본과 권력을 소유한 일부로 제한되곤 한다. 물론 최근 한국의 문화산업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면을

보임에도, 여전히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산업을 실패의 사례로 규정하고 회고적으로 반추하기보다, 이에 대한 합리적이며 적합한 비판을 통해 전향적으로 쇄신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이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산업을 복기하고 이를 특히, 광주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3. 지역 공간을 관리하는 권력의 담론: 광주의 과거와 현재

광주는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 '민주주의의 도시'로 각인되어 왔다. 이것은 지난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이다.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한 광주는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이른바 '광주 정신'으로 명명하고, 세계 도시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21년 미안마에서 민주화 투쟁이 일어났을 때, 광주와 5·18 기념재단은 미안마 시민들을 지지하며 그들에게 의료용품과 생필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Choi, 2021, 3, 9).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의 경험은 광주와 깊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부터 파생된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세계 도시들과의 연대를 통해 구현해 왔다. 주목할 것은 광주가 연대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1960년대부터 '예향'의 도시를 표방했던 광주⁵⁾는,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적 가치를 '문화'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따라서 광주시와 광주의 지역민들은 1990년대부터 문화인프리를 조성하여 도시를 변화시키고자 하였고, 이는 광주비엔날레의 출범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는 1990년대 이후 광주비엔날레(1995)와 김대중컨벤션센터(2005)를 설립했고, 이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15)을 유치했으며, 최근에는 복합쇼핑몰 건설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광주가 추구하고자 했던 도시 이미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성공적 사례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도시의 문화인프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누구에 의해 유치되었는가와 이를 통해 초기에 화두로 제시했던 공존과 상생의 문제, 가령 지역민들을 비롯한 소수자, 사회 속 타자(他者)와 충

5) 그런데 광주가 내걸었던 '예향'이라는 기호는 도시화, 산업화 과정 중 한국의 수도권으로 문화예술이 집중되면서 내용 없는 지역 담론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차후 광주비엔날레 설립에 있어 '예향'이라는 지역성은 문화예술시설 유치에 합리적인 조건으로 작동한다(안영진 외, 2014, 244-245쪽).

분히 연대하고 교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문화산업 정책에 있어 지배와 종속, 공존과 상생, 구성원의 삶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직결되기에 중요한 지점이다. 그중에서도 ‘누구에 의해’, ‘어떠한 과정으로’ 광주가 ‘문화도시’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중앙정부와 도시 간 관계성은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단지 광주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도시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역 스스로 문화산업을 원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 기반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 담론은 지역 문화산업 실행에 있어 중요한 기제⁶⁾가 된다.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혹은 지역 내에서 생성되는 담론은 도시민들의 행위와 경험을 합리적인 형태로 교정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간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행위는 지역민들이 그 공간 안에서 사회가 규정한 ‘합리적 행위’만을 할 수 있게 만든다(Harvey, 1990/1994, 309쪽). 이것은 푸코(Foucault)의 ‘지식-권력’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 〈광기의 역사〉 등의 저술을 통해 사회 내 존재하는 억압의 공간이 어떤 담론을 생성 및 체현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권력에 의해 생성된 담론이 공간에 투영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푸코의 관점은 도시 공간을 단순한 역사 결정론과 결별시키고 수사적·예술적 전략들을 포함하는 자율적인 공식체계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Harvey, 1990/1994, 264쪽, 371쪽). 특히, 푸코가 제안한 지식-권력, 에피스테메 등의 개념은 도시 공간이 내장하는 담론과 복잡다기한 권력의 지형과 동학을 살피는데 유용하다.

푸코에 따르면 지식은 한 사회 안에서 진리처럼 다루어지는 담론을 말하는데, 이는 우연적이거나 가변적 행위를 논리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자신과 타인을 지배하는 도구가 된다. 한편, 역사적 시대마다 다양한 담론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틀 짓게’ 하는 무의식적 인식의 조건이 있는데, 푸코는 이를 ‘에피스테메’(episteme)라 지칭한다. 시대별 에피스테메는 사회의 인식을 틀지어주는 구조가 되는데, 이는 역사의 연속성이나 진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건과 이것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전문영, 2021, 125-126쪽).

푸코가 제안한 지식-권력, 그리고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의 활용은 연구 대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틀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가 주장한 지식-권력의 개념은 도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담론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공간을 재편하고 있는지, 그러한 담론의 배경이 된 언술과 당시

6)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지역 문화산업을 분석한 몇몇 논문은 각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 변화를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문화정책 연구와 관련한 논문 등의 문헌들은 분석에 해당하는 시기의 집권 여당 정책 방향이나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서술하는 양상을 띤다(황설화, 2019, 73쪽).

통용되던 일련의 지식체계는 무엇이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비판적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에피스테메라는 개념과 함께 보여주었던 그의 주장은 담론을 통해 형성된 도시 공간이 진보의 과정을 통해 '발전'했다기보다, 교체되고 수정되며, 조율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는 푸코가 제안한 위와 같은 개념들이 담론 배후에 있는 권력을 동적(動的)인 존재로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은 권력의 미시정치학의 문제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함을 보여준다. 물론, 푸코의 개념들은 권력에 대한 저항, 주체의 위상에 대한 설명에 있어 분명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하고 한 사회가 추구해야 할 패러다임을 국가 담론이 사회에 어떻게 통용시키는지,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위나 지식, 정서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지를 밝혀내는 데 유용한 틀이 된다(마동훈, 1997, 242쪽).

이러한 푸코의 관점은 익숙해진 현대사회의 일상성을 권력의 산물로 인식하게 해준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일상성에 대한 반성을 시도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질성 혹은 부자연스러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연구는 푸코가 제기했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의 몇 가지 개념들, 가령 권력, 지식, 에피스테메 등을 활용해 담론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⁷⁾. 이는 구체적으로 특정 공간에 문화산업이 투입되면서도 그것이 정책 담론에 의해 연속적이거나 단절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에피스테메⁸⁾란 개념을 활용해,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담론 형성의

7) 사회 내 권력관계와 지배, 종속 등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담론 이론을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한 분석을 시도한 학자로 푸코 이외에도 페어클러프(Fairclough), 반 다이크(van Dijk) 등이 있다. 푸코는 언어학의 담론 개념을 수정, 보완하여 사회과학 분야로 이를 끌어들이었고, 언어 이면의 권력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데올로기 비판을 가능하게 했다. 페어클러프는 비판적 언어학과 체계기능언어학을 계승하고 푸코의 계보학적 연구로부터 비판적 관점을 이어받아 사회문화적 접근을 시도했다. 반다이크는 사회인지적 접근을 중요시하며 담론을 연구했다(진문영, 2021, 30-31쪽, 149-150쪽, 163쪽). 이 글에서는 특히, 푸코의 관점을 차용하고자 했는데, 이는 사회 내에서 주류 담론으로 여겨졌던 언어들을 계보학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 되어 공간에 적용되는 현상을 살피기 위함이었다. 연관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함께 푸코의 일련의 개념, 예컨대 에피스테메(episteme)와 같은 개념은 한국 문화산업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분화되었던 담론들이 '논리적인 것', 혹은 '지식'처럼 자연화해 통용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8) 이는 어떤 시대의 한 담론에서 그 담론에 속하는 개별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정한 평가의 틀 내지는 준거라 할 수 있다. 혹은 어떤 지식을 가능하게 하고 그 지식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한하는 구조이다. 일례로 일련의 행위나 사건, 사회 현상들이 유기적이거나 중층적 관계 속에서 하나의 유의미한 지식이 된다면, 이는 정신의학이나 병리학 등 구체적인 지식의 체계와 언술 속에 일정한 관계들의 집합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에피스테메(episteme)는 이처럼 특정한 지식이나 정상성을 구성하는 조건이나 관계들의 집합, 혹은 담론의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의 집합(Foucault, 1970/2014, 28쪽, 167쪽)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푸코가 관심을 가진 것은 사회적 진공 속에서의 개인적인 성취나 발견들이라기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또, 개인이 특정한 구조나 장(場) 내에서만 자신의 위치를 잡고, 사유하고, 행위할 수 있는 관계들의 총화와 그것의 작동 방식이다.

과정을 지식-권력⁹⁾의 개념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광주의 문화산업은 그 기원과 형성 과정에서 복수의 주체들이 참여해온 만큼 다양한 담론이 생성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들은 상호 충돌과 경쟁, 접합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지배 담론에 흡수되거나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¹⁰⁾. 담론 간 갈등과 논쟁은 대개 문화산업을 경제적 성과에서 바라보면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논지와 지역민들의 문화, 삶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지역민들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지점은 담론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지점이자(이기형, 2006, 120쪽), 담론 뒤에 있는 권력의 동학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이 글은 지역 문화산업에 있어 공간의 특성이 정책적·사회적 담론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재편되었는지, 그 이면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주류가 된 담론과 소외되고 배제되는 담론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 집권하던 대통령의 공식적 언술들과 정부의 정책, 이에 조응해 생산된 정책 보고서와 연구 보고서 등을 총체적·연계적으로 활용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통령의 언술은 대통령 취임사와 예산안 시정연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동시에 정책 보고서, 연구 보고서 등은 광주 및 전라도에 소재한 연구소의 발간물, 수도권에 소재한 연구소의 출판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 광주의 대표적 문화산업 기관인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제작한 백서 또한 함께 활용하였다.

이들은 당대를 대변하는 합리성과 이른바 시대정신이 발현된 ‘공적 영역’의 텍스트들인 동시에, 이것이 언어의 형태로 ‘논리적으로’ 재구성되어 이른바 여론으로 형성되기 위한 질료로서의 담론이라 볼 수 있기에 분석 대상으로 효과적이라 판단하였다. 분석을 위한 보고서의 선정에 있어 수도권과 지역의 연구소에서 출간된 것들을 함께 보고자 한 이유는 이들이 중앙과 지역이라는

9) 지식-권력의 관계에 대해 푸코는 양자가 가진 관계를 내재적(internal)인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내재적이란 의미는 과학적 지식이 가지고 있는 사회정치적 맥락은 과학적 지식 자체의 내용을 틀 짓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의 요소들은 주어진 시기에 주어진 과학적 담론의 유형을 특징짓게 하는 규율이나 제약의 틀과 일치해야 한다(Oksala, 2007/2008, 90-91쪽).

10) 하나의 예로 광주비엔날레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역 정부와 지역 예술가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는데, 이는 권력의 담론과 민중이 생산해 낸 담론이 대립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항 담론을 생산한 지역 예술가가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주요 행위자로 편입하여 담론을 생산하는 것은 갈등 관계에 있던 두 시각이 접합되어 하나의 주류 담론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동시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통일미술제가 사라지는 과정에 대해 의문을 가진 다른 예술가들과 대중의 담론은 자연스럽게 축소되거나 배제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문화산업이 실행될 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때 문화산업은 변화와 질충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항대립(二項對立)적 공간의 상징성, 혹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텍스트로 읽힐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이와는 상반되는 시각에서 대중과 예술가, 지식인들의 담화 또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언술은 처음부터 힘을 가진 담론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 주체의 동의를 얻는 행위와 실천을 통해 일련의 정상성을 획득하여 언젠가는 주류 담론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4. 예향에서 민주주의의 도시까지: 도시 담론의 형성과 권력

모든 시대에는 학문적 담론과 언술이 통용되게 하는 ‘지식의 그물망’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 사회 안에는 그 사회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작동하는 모순된 담론들이 존재하는데, 이 담론들은 사회 안에서 압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담론은 단절과 불연속의 과정을 거친다 (Mills, 2003/2008, 126-127쪽). 이것은 한 도시가 담론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광주는 도시계획을 포함한 근대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며 이를 담론화해 왔기에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근대 시기, 광주는 물산이 풍부한 곡창지대로 수탈의 대상이 되어왔다. 때문에, 동학운동, 독립운동 등의 사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도시였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이러한 사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광주의 지리적 특성이다. 호남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러한 조건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해 다양한 사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안영진 외, 2014, 244-245쪽). 달리 말해, 광주를 비롯한 호남은 그 동안의 도시와 지역 발전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박정희 정권 아래 이루어진 지역 정책은 서울 행정구역 확장,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 확충,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건설 등이 주를 이루었다(송은영, 2014, 53쪽).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은 현대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경로를 나타내는 동시에, 한국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현대화, 세계화의 조류로 편승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주목할 점은 광주가 과거부터 추구하고 노정해 왔던 도시의 기호, 혹은 상징적 가치이다. 과거부터 광주는 ‘예향’을 지역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오랜 시간 일관되게 담론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호는 도시개발이나 문화산업과 관련한 정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고, 광주는 국가의 개발 대상이 되어야 할 주요 공간 목록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것은 광주가 중앙정부의 공적 담론에서 소외된 지역임을 알게 해주는 동시

에, 중앙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미시적 담론들은 공명이 없는 공허한 담론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행하는 권력의 단면과 이것이 활용하는 공격 담론의 힘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광주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변화가 시작된 계기는 1980년대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볼 수 있다.

1980년 군사쿠데타와 함께 신군부가 군부를 장악하고 비상계엄령이 내려지는 등의 상황에서 광주는 국가의 차별과 억압을 경험했고, 시민들은 이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 즉 '5.18민주화운동'¹¹⁾을 전개하였다. 시위 과정에서 광주는 계엄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는데, 이러한 비극적 경험은 시민들로부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든 동인(動因)이 되었다. 동시에 이 사건을 기점으로 광주는 중앙정부와 결부되는 계기를 맞이한다. 일례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광주는 1986년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에는 광역시로 개편¹²⁾되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적 측면에서는 1995년에 '광주비엔날레' 출범이라는 변화를 겪었다. 1995년 창설된 광주비엔날레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예향의 도시이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고양된 민주, 인권, 평화를 상징하는 '광주 정신'을 모태로 하여 출범했다. '광주정신'은 인류의 미래 지향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명목 아래 비엔날레 개최 대상지가 아니었음에도 광주에 비엔날레를 유치시킬 수 있게 한 정치적 명분이 된다(박양우, 2015, 12쪽). 이것은 '광주 정신'이 지역 정체성으로 담론화되며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만한 도시 인프라가 빈약한 상태에서, 비엔날레가 광주에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도시의 상처를 문화로 치유하고, 지역에 뚜렷한 산업기반시설이 없던 광주에 문화산업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정치적 고려로 볼 수 있다.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비엔날레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깊이 행사된 사례이자, 국가적 욕망이 투영된 문화산업의 산물이기도 했다. 여기에 당시 문민정부였던 중앙정부가 '세계화·지방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비엔날레 출범은 빠르게 실현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비엔날레 창설 취지문에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 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민족정신을 존중하며 지구촌 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 문화 생산의 중심축"으

11)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맥락을 시민들의 '저항 정신'이라는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유에 대해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 호남차별에 대한 불만, 저항 운동에 대한 역사와 전통, 경제적 구조와 공동체 문화 등을 제시한다. 여기에 시위 당시 행해졌던 공수부대의 시위대 '과잉진압'은 시민들을 결집하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최정운, 1995, 122쪽).

12) 출처: 두산백과. from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45822

로서 역할을 모색한다고 서술한다(박양우, 2015, 12쪽).

국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이 세계 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과제와 역할을 부여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광주비엔날레의 창설은 '시공간 압축'을 통해 가속화된 세계화의 조류와 담론의 영향, 그것에 편승하고자 한 국가적 욕망이 투영된 산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비엔날레의 시작은 단순히 지역을 재편하는 과정을 넘어 세계화의 흐름과 세계 경제 속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국가 사회적 욕망이 중첩되어 나타난 문화적 산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간에 대한 투자는 자본의 순환을 위해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곤 한다. 나아가 효과적으로 관리된 공간은 생산과 분배, 소비, 계급투쟁, 문화와 생활양식 등이 '구조화된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Harvey, 2005/2008, 165쪽).

1995년에 광주비엔날레가 설립되었다면, 1996년 부산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2000년 전주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출범하였다. 이들은 모두 '국제행사'로서 기능하는 문화기획이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을 지닌다. 물론,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을 구조화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의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투영됨으로써 도시를 (재)구조화할 수 있음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즉, 이는 사회 내 힘을 가진 주체가 생산한 담론이 지역 공간에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은 개별 국가와 정부의 영향력에 더해,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서구의 지배적 담론이 지역에 수용되는 과정도 보여준다.

가령, 비엔날레 창설문에 세계화와 함께 로컬리티가 서술된 측면은 비엔날레의 창설이 국가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즉 세계화와 지역화가 조화롭게 투영되어 출범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비엔날레 창설 취지문에 나타난 '세계화와 '민족정신'은 일견 상이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는 정치적 구호가 유행했던 1990년대 한국 사회의 문맥에서 지역(성)을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물화(物化)하는 시도이다. 특히, 이 부분은 광주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이 위로부터 '선별되고 이식된' 것이자, 이것이 국가적·사회적으로 전면화된 것이었기에 문제적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담론의 생산이 통제되고, 선별되고, 조직되는 일련의 정치적인 절차가 사실이나 시대정신으로 간주되며 개별 담론이 한국 사회 내에서 일련의 정상성을 획득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2년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선정되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2002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된다. 광주가 '문화수도'라는 수식어를 통해 명명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광주 문화수도론'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주창한 것이 아니라, 외부 주창

자, 다시 말해, 대통령 후보를 통해 대선 공약으로 정책 의제(policy agenda)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담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수도라는 용어는 일종의 정치적 은유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행정수도 용례에서 정치 행정 국가기구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이전하듯, 문화 관련 국가정책 결정 기구들도 문화수도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서순복, 2004, 10쪽). 실제로 세종시로 다수의 국가 행정기관이 이전했듯,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포함한 16개의 기관이 광주와 전남으로 이전되었다(박철홍, 2019, 1, 10).

그런데 세계적 규모의 복합 문화센터가 건립된 대표적 도시들은 그것이 건립되기 전부터 이미 문화의 향유와 생산이 가능한 도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정미라, 2006, 150 쪽)을 상기해보면, 광주가 인위적으로 재조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연계와 관련해 ‘민주화운동’이 언급된다. 이는 1980년에 광주가 겪었던 ‘역사적 상흔’이 ‘지역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유연하게 탈바꿈해 일정한 정치적 목적에 복무하는 담론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껴 말해, 광주 민주화운동은 10년 내에 두 차례의 큰 문화산업을 도시에 유치하는 정치적 행위가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담론구성체로 가능한 측면이 있고, 이는 타 지역 혹은 지자체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독특한 ‘지역성’ 혹은 ‘역사성’이란 언표로 활용되었다. 이제 광주는 민주화운동 이전, 오랜 시간 공적 담론에서 소외되어왔던 역사에서 당대의 지식 권력과 정상성을 직조하는 담론구성체를 전유해 ‘세계화 속 광주의 가능성’을 주창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세계사적 전환점**에 직면했습니다. 도약이나 후퇴나, ... 우리는 외환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 한반도는 중국과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지난 날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¹³⁾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강조는 인용자〉

“지난 2002년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월드컵에서는 4강 신화를 이루어냈습

13) 출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2003).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Retrieved 4/21/23 from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inauguration/president16.jsp

니다. 부산 아시안게임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국민 여러분의 노력을 세계만방에 보여준 쾌거였습니다. ...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¹⁴⁾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신년사; 강조는 인용자〉

2000년대 초반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류’ 현상으로 국가적 위상이 급부상했고, 국가 경제력은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으며, 월드컵 축구경기에서는 4강까지 진출하는 이례적인 경험을 하였다. 이는 과거 한국이 경제적,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대국에 종속되어 왔었기에 더욱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문맥에서 ‘동북아시아’를 강조하며 이제 그 거점이 되겠다는 대통령의 언술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을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국가적 욕망을 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실현 방안 중 하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와 같은 공간과 인프라를 창출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지역은 시대적 가치이자, 국가적 열망을 반영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구현할 대상으로 작동한다.

이런 문맥에서 국가적 차원의 개발주의 정책이 시도되는데, 이는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사례로 광주는 참여정부 시기에만 세 곳의 대형 문화 기관 -김대중컨벤션센터¹⁵⁾와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디자인비엔날레¹⁶⁾-을 유치 및 설립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오늘날 광주 문화산업의 중심축 중 하나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또한, 해당 시기에 기획되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물론, 위 시기에 건축된 문화시설들은 로컬 문화를 고양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인프라¹⁷⁾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비

14) 출처: 노무현 사료관 (2003).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신년사. 〈노무현 사료관〉. Retrieved 4/21/23 from <https://archives.knowhow.or.kr/record/all/view/2046905>

15)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05년 9월에 개관했다. (출처: 김대중컨벤션센터 홈페이지. from https://www.kdjcenter.or.kr/kor/menu?menuId=64_70_73)

16) 2006년 개원한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제5회부터 현재까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를 주관하고 있다. 개최는 2년 주기로 홀수년에 전시를 진행한다. (출처: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홈페이지. from <https://www.gdb.or.kr/content/gdb>, 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from <https://www.gdc.or.kr/history>)

17) 컨벤션센터는 로컬 차원에서는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관광 자원이 되어 관광객을 유치시킴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전시컨벤션 산업은 정보 및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타국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친선을 도모하여 지역의 국제화를 꾀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강준수, 2015, 74쪽; 이영빈, 2014, 62쪽). 디자인비엔날레 또한, 디자인 산업의 융성과 도시 브랜드 강화를 가능케 하는 문화 행사이자 고부가가치를 지닌 사업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산업, 미래, 기술, 인간, 철학 등의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산업에는 국가 경쟁력, 국가, 지자체, 경제성, 미래는 창의력, 지속가능성 등이 포함된다(고산, 2022, 3쪽). 그러므로 두 기관은 도시 인프라이자 문화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엔날레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설립 이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역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한 면이 있었다. 이는 도시에 문화와 관련된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확충되면서 문화산업의 저변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들은 과거부터 예향을 지역성으로 언급해온 광주가 문화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나, 중앙정부가 개입하면서 물질적 기반을 갖추게 되는 단계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단계는 급진적이면서도 집권 정당이 변화될 때마다 분절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된다. 이러한 방식의 도시 형성은 다음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 시기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 재원 확충과 광역경제권 구축, 문화와 체육 생활의 향유권 확대 등으로 서술된다(정동일, 2018, 20쪽). 눈에 띄는 것은 실용과 효율성, 경쟁이라는 단어의 등장인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였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나가는 데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ی겠습니다. …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국가입니다. 최근 세계무대에서 주목받는 **한류**는 그런 전통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 이제는 문화도 산업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문화강국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격조가 올라갑니다.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화합하며 문화로 발전해야 합니다.”¹⁸⁾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강조는 인용자〉

“… **지역발전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올해보다 7.9% 늘어난 21조 1천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내년부터 모두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¹⁹⁾

〈이명박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강조는 인용자〉

18) 출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2008).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Retrieved 4/21/23 from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inauguration/president17.jsp

19) 출처: 김선주 (2008, 10, 27). 〈진문〉李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뉴시스〉. Retrieved 5/13/23 fr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2347792?sid=100>

취임사에서 드러나듯 이 시기는 실용과 효율이 중시되고 공공부문에서도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중시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시 공간 또한, ‘경쟁’이 중요하고 경쟁의 결과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정책 노선이나 실제 정책에서도 이전 정부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세종시 및 혁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자 하였다. 세종시 및 혁신도시 폐기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실패로 끝났으나, 여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거의 폐기되었다. 당시에는 문화산업 저변에 대한 지원도 급격히 약화되었는데, 대표적 국책사업 중 하나였던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또한, 특별법으로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성경룡, 2013, 33쪽).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에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은 더욱 위축된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고유 사업과 비슷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6년 789억 원이었던 아시아문화전당의 예산을 403억 원으로 감소시키고, 2016년 904억 원이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은 1,278억 원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 계획은 이를 방증한다.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 문화산업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광주비엔날레의 예산 또한, 국비가 축소되어 제11회 전시 대비 제12회 전시의 예산이 60%대로 감소하는 변화를 겪게 된다. 이것은 광주뿐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비엔날레도 포함된 것이었는데, 일각에서는 광주는 ‘세월 오월’이라는 작품으로 대통령을 풍자하고,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이빙벨’이라는 작품을 상영하면서 현 정부의 심기를 거스른 탓이라 주장했다(김성수, 2016, 11, 4). 이것은 이후 광주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힘으로써 힘이 실리는 주장으로 남게 되었다(송형일, 2016, 11, 14).

광주는 인권적 가치를 표방하며 문화수도를 피하엿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송진희(2020, v쪽)는 광주가 광역시 중에서도 문화기반을 지원하는 경제 부문이 중하위권 수준이라는 점이 문화예술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한다. 이것은 광주가 문화산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광주시가 중앙정부가 생산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전술하였듯, 광주의 문화산업 정책이 정권 교체 시기마다 상이한 모습을 띠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중앙정부 교체 시기마다 문화정책이 변화와 부침을 겪는 것은 거시적으로는 국가정책, 미시적으로는 지역정책 안에 내장되어 있던 언술의 단절과 부조화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는 푸코가 언급한 에피스테메 개념이 함의하듯, 관련 담론의 단절과 불연속성은 한국의 문화산업 정책이 집권 정당에 따라 수시로 교체, 단절, 굴

절되어 온 특성을 설명해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담론이 그 시대의 진리처럼 통용되는 것에 대한 맥락을 넘어, 정책 담론이 공간을 전유하고 물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화의 조류에 맞추어 정부는 지역을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도구나 수단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왔다. 이는 도시와 공간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물적 대상이나 경제적 상품으로 인식하게 하기에, 특히 문제적이다. 동시에 공간이 관광 등 문화 상품의 형태로만 개발되는 것은 도시를 자본주의의 통치성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지역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자본을 축적해줄 공간을 차별화하고 지리적 불균 등을 통해 공간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기에 공간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따라서 공간이 물질적으로 다루어지는 현상, 이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려는 욕망과 동학에 대한 경계와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5. '문화도시 광주'의 형성과정에서 경합하는 담론과 주체들

계획되고 축조된 도시 담론은 일방적으로 공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도시와 지역에 필요하고 최적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정책적·외재적 변화가 발생할지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생산한 주류 담론에 저항하거나 이와 경합하는 움직임과 담론 또한, 활발하게 생성되어왔다. 특히, 이는 도시 내 굵직한 문화산업이 실행될 때마다 가시화되어 드러난다. 전술한 사례인 광주비엔날레 역시 이러한 과정을 겪어왔다. 광주비엔날레는 창설과 시행에 있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주도한 반면, 시민 사회와 지역민들의 목소리와 참여는 상대적으로 배제된 채 진행되었다. 이는 국가기구와 지자체가 지역의 고유하고 차별화된 정체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전유하고 그것을 상품화하여 도시를 재구성하는 데에만 관심을 둘 뿐, 이를 체화하거나 지속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예로 지역 예술가 단체가 광주비엔날레에 대하여 '통일미술제'를 개최했다는 사실(박양우, 2015, 32쪽)은 대규모 문화산업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관련해 시사점을 준다. 광주비엔날레에 대립 구도를 보였던 '통일미술제'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엔날레의 출범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사를 유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처벌과 진상규명이라는 목적을 희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오월 관련 시민단체와 진보적 참여 미술 집단에서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광주 미술인공동체는 광주 '통일미술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터비엔날

례)(1995.9.20~10.15)를 별도로 개최하였다. 그러나 비판적 담론을 생산하던 '통일미술제'는 1997년 2회 광주비엔날레에 특별기념전으로 편입되어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후에는 추진되지 않았다(박양우, 2015, 32쪽).

주지할 것은 2회부터 광주비엔날레가 '통일미술제'를 흡수한 과정이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 이후, 광주시는 미술관 조직에 광주비엔날레의 직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고자 하였고, '광주비엔날레 민영화'와 함께 인사에도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당시 정부 산하 기관들과 공기업의 민영화가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상황이었기에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 민영화'가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조류는 광주비엔날레의 핵심 실무자 사무차장 자리에 민간인 광주시립미술관장이 임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옥조, 2001, 225-226쪽). 시기적으로 많은 기업의 민영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엔날레 또한, 이를 통해 조직을 개편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은, '민영화'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조직과 경영의 효율을 담보해 낼 수 있으리라는 당시의 시대상과 담론구성체, 혹은 에피스테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였다.

나아가 광주비엔날레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개최되던 '통일미술제'를 비엔날레의 특별전으로 전치시킨 것은 권력을 과점하고 비교적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 어떤 이유에서이건 경합하는 담론을 일부 수용하게 만든 담론의 유동적·역동적·비고정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예컨대, 광주비엔날레와 '통일미술제'가 보여준 일련의 행위들은 국가기구가 공간을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대신, '문화'라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방식을 통해 통치함으로써 도시를 점유하려는 시도와 그에 대한 저항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목적에 문화가 동원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오늘날 거대 문화산업을 주관하는 통치기구의 공간과 공간의 지배를 둘러싼 권력 행사 방식을 돌아보게 한다.

또한, 초기에 생성된 시민 사회와 지역 예술가들의 저항 행위는 주류 담론과 경합하는 특성을 보여주지만, 이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소수(자) 담론이 주류 담론에 통합되는 과정을 재현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공간 압축을 통해 지리적으로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갖게 되기도 했다. 따라서 시공간 압축은 소수 집단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즉, 지구적 연대가 가능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비록 연대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본축적과 계급사회의 동학을 구성하는 권력의 공간에 대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해방의 가능성에 한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Harvey, 2000/2001, 92쪽).

동시에 하비(Harvey, 2000/2001, 92쪽)가 언급하듯, 그것은 계급투쟁이 발생할 때마다

자본주의가 이를 빈번하고 성공적으로 제어하는 과정과 통치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비엔날레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전시 주제와 목적에서 일정 부분 중앙정부의 정책 담론에 편승하거나 수렴되는 면모를 보이기에, 민중 예술가들의 비판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일례로 광주비엔날레는 참여정부 집권 기간이었던 5회(2004년), 6회(2006년) 주제전에서는 아시아의 과거와 현재, 정체성과 세계화와 지역성 간의 충돌 등에 대한 현상들을 예술로 승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7회 전시부터 광주비엔날레 주제전에서 ‘아시아’를 활용하는 단어가 사라졌다. 이는 ‘글로벌 코리아’의 이미지를 담론화하고 이전 정부보다 가시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구축하려 했던 당시 정부의 정책 및 담론과 중첩되는 지점이다.

국가가 지역을 통치할 때 정주민은 지역성을 자각하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집단이 토지에 투자되는 기반시설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제도적 지원을 시도하는 것은, 통치 기구의 존재를 공고히 한다(Harvey, 2005/2008, 165쪽).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도 문화산업의 실행 주체에 대한 비판은 이어진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최상층부에서 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그 아래 배치되었다. 이의 하위 집단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임한 특별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기획단이 있고, 그 아래 광주광역시의 문화정책실이 배치되었다.

“대체로 문화관광부 추진기획단이 지방공무원들에게 ... 다소 일방적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며, 지방공무원들은 ... 대체로 자신들의 계획은 이러하니 ...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호소하는 식의 태도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며,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합의적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내오지는 식의 프로세스관련이나 지배구조에 관련한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서태성 외, 2006, 85쪽)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방화를 위한 대응과제〉

위에서 보듯, 문화관광부 기획단과 광주시 문화정책실의 수직적 관계는 지자체 기능을 활성화하고 권력을 안배하겠다는 당시 정부의 언술과 달리, 지역 정부가 자율성을 지닌 힘 있는 주체로 호명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동시에 지역 정부 또한, 문화산업의 실행 과정에서 수동적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행위 주체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집행 기구의 수직적 배열과 역할 분담은 문화중심도시 형성 과정을 협력적이거나 합의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기획단과 광주시의 문화정책실은 실무적인 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였으

나, 문화관광부 추진기획단이 지방공무원들에게 지역 계획의 핵심을 전달하고 따라주기를 요구했고 지방공무원은 그 요구에 동의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서술한다(서태성 외, 2006, 81-88쪽).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적이고 굳어진 관계들은 인간과 공동체, 사회를 판에 박히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이영주, 2011, 258쪽).

물론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사업의 중심이 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해 일련의 갈등이 존재했다. 첫 번째 갈등은 부지 선정과 관련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국제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한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구 전남도청 별관의 보존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그중 설계안과 관련된 두 번째 논쟁은 지자체, 중앙정부와 시민단체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고, 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 시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갈등은 설계안 '빛의 숲'으로부터 시작된다. '빛의 숲'은 구 전남도청과 경찰청을 중심으로 전당의 건축물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민주 광장과 전남도청 등의 부지를 친환경적 공원으로 조성해 지역민의 일상과 호흡함으로써 민주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안이었다. 이 도안은 환경성과 공용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건축 전문가와 환경단체, 중앙정부²⁰⁾와 5·18 관련 단체들은 찬성하였으나 국제적 랜드마크를 원했던 광주시와 광주의 구의회, 광주시 주민자치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이순자 장은교, 2012, 53-54쪽).

이러한 갈등은 당선 설계안을 토대로 한 종합 계획안이 확정되면서 일단락되었는데(이순자 장은교, 2012, 54쪽), 이는 문화산업 추진에 있어 집단 간 충돌은 다층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언제든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랜드마크를 원했던 광주 지역 단체들은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세계 도시의 자취를 추적해 경제적 부흥을 이루겠다는 한국의 문화산업 담론, 즉 당대의 에피스테메를 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주', '인권' 등 인문학적 가치를 지향하는 광주시와 광주의 일부 시민 단체가 '가치 합리성'이 아닌, '경제 부흥'과 같은 '목적 합리성'을 위해 중앙정부 및 환경단체 등과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광주의 역사성을 도시의 기호로 표방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함에 따라 광주가 지향하는 저항적 의제나 기호들이 도구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문화산업이 경제 부흥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목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것으

20) 이때 중앙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기존 설계안을 지지하는 듯 보이지만, 이는 설계안의 변화로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 할 수 있다(윤연주-류용재, 2014, 179쪽).

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것 외에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도시 계획에는 ‘가치 합리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와 환경단체 등이 제안한 설계안은 그러한 측면이 고려된 결과라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지한 설계안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추진된 것은 지배적으로 수용되어 왔던 ‘경제효과’ 중심의 문화산업적 에피스테메가 균열을 드러내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산업의 방향성 및 계획과 접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설계안을 반영하여 건설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하에 문화시설이 존재하는 한편, 지상층에는 하늘마당과 같은 쉼터를 조성하였고 이는 많은 지역민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주말에는 하늘마당에서 담소를 나누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채로운 버스킹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을 유입하고 있다. 광주시와 일부 시민단체가 제시한 랜드마크에 초점을 맞추어 건물을 설계하였다면, 이러한 현재의 도시 전경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랜드마크는 전시 위주의 스펙터클적 속성으로 인해 도시 경관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며 사람들을 편안하게 끌어들이는 접근성 또한 떨어진다. 특히, 이는 민주, 인권, 평화 등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지향하는 ‘광주 정신’과는 이질적인 형태의 건조물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문제 제기가 늘 공공성과 삶, 문화를 담보하기 위한 저항이나 움직임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이는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는 기업주의 도시²¹⁾의 문맥에서 도시 재개발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공간으로부터 배제하고 주체화된 집단이 도시의 공공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와 같은 기업주의 도시에서는 도시재생과 경제적 변화에 따라 손해를 보는 집단들이 다양한 형태로 생겨난다(장세룡·류지석, 2010, 884; 911쪽). 이처럼 공간이 사유화되어 소수에게만 열리는 것은 지역 내에서 배제와 소외, 나아가 불균등한 사회의 조건이 되어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로컬이 관리 및 통제되는 가운데 파생된 일련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일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지역의 정주민이 밀려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문홍주(2022)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방의 동명동은 사업체와 사업체 종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도시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상업화로 인해 도시경제가 활성화되었으나, 임대료

21) 여기서 기업주의 도시는 특정 도시가 탈규제와 자유무역을 강조하며 국가 역할을 축소시키고 고용 성장을 장려하는 도시 협치 양식을 의미한다(장세룡·류지석, 2010, 884쪽).

는 높아지고, 자본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상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변 지역의 문화적 활성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동명동의 문화적 요소가 부족한 것은, 대규모 공공문화시설의 문화 프로그램에 정책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주변 지역에는 실제로 녹어들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문홍주, 2022, 99쪽). 그런데 이는 위 시기에 집권했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이질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 경제 주체들이 하나가 되고 다 함께 힘을 모을 때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토대 위에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 **한류 문화**가 … 국민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 …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갑시다.”²²⁾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강조는 인용자〉

“영국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창조경제를 실현해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 경제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그 꿈의 실현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타운 사이트도 개설하였습니다. … 창조경제타운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고 계신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문화는 산업측면에서 창조경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해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강조는 인용자〉²³⁾

22) 출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2013).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Retrieved 4/21/23 from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inauguration/president18.jsp

23) 출처: 경향신문 (2013, 11, 18).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문. 〈경향신문〉. Retrieved 4/23/23 from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1311181109412>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가 ‘경제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 언급한다. 그중 주목할 것은 국민의 행복에 대한 부분이다. 취임사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의 행복은 과거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한강의 기적과 등치되며 이의 결과인 국력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달성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된다. 이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언표와 연결되는데, 과거 ‘한강의 기적’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이룩한 국가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등장하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국민의 행복을 환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발전’으로 명명되는 경제적 변화로 이득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은 대체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 한정되며 이른바 ‘낙수효과’는 구현되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예외 없이 지역 공간에 투입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발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지역 행복 생활권 전략, 맞춤형·패키지 지원전략,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전략 등이다. 그중 맞춤형·패키지 전략은 “지역 현장에서 여러 사업의 연계 추진이 효과적인 경우”에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정동일, 2018, 29-30쪽). 광주외의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대인예술시장-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전일빌딩 일대를 묶어 개발하는 것과 함께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을 진행해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근대문화거리, 카페거리 등을 연계한다고 언급된다. 이는 지역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목표가 실현됨을 보여주는데, 관심 있게 볼 것은 이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일례로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은 케이팝 스타 골목 조성 및 케이팝 체험 관광 프로그램의 조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2021, 100-103쪽, 209쪽).

“2015년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광주 도심관광 트레일’ 5개 코스를 활용하여 관광콘텐츠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은 안내시스템 구축, (가칭)케이팝 스타골목 조성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케이팝 스타를 활용해 케이팝 체험관광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2021, 100-103쪽, 209쪽)

〈20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아시아문화전당은 설립부터 현재까지 광주 정신과 민주, 인권 평화 등을 주창해왔으나, 갑자기 한류 콘텐츠를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은 초기의 목표에서 벗어난 자의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이것이 한류를 거쳐 케이컬처(K-Culture)가 부상하고 있는 오늘날, 정부와 복수의 지자체

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예술과 문화, 관광 전략일 순 있지만, 도시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고유한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애초의 계획과는 괴리를 보여준다. 오히려 이는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성장을 중시하는 도시개발을 추구하고 시장논리의 합리화에 의존해 도시 개발정책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방적 특성보다 도시 엘리트가 추구하는 도시정책을 입안한다(최병두, 2011, 267쪽).

이처럼 광주가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한류나 케이컬처를 활용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문화를 바라보는 경제주의적 관점을 창의적·성찰적 변용이나 혼종화 없이 답습하는 것으로, 전술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의 특성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그간 광주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제안해 온 민주, 평화, 인권 등 이른바 ‘광주 정신’을 이러한 정책 변화란 문맥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접합할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와 형식을 유행과 트렌드를 좇아 조급하고 인위적으로 활용하려는 도시 및 지역 정책이기에 비판을 야기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선호하는 정책, 이를테면 케이컬처를 활용하는 형태의 문화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권력을 소유한 집단이 생산한 담론을 일련의 성찰이나 비판적 전유의 과정 없이 하나의 지식이나 시대정신으로 여기고 기존의 정책 및 사회적 담론을 교체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드러내 보여준다.

광주의 경우,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민의 관심이라는 차원에서 문화산업이 활성화된 세계적 도시들과 유사성을 지니는 반면, 창의적이며 독창적 문화원형과 콘텐츠의 부재,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재정 자립도, 예산의 지역 내 재분배에 대한 부분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가령, 광주의 지역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케이컬처와 같은 담론을, 이것이 그저 트렌드이거나 중앙정부의 담론이라는 점에서 재창조나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체화(體化)하려는 제스처는 도시의 자치권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그나마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지역성마저 희석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겠습니다. …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²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강조는 인용자〉

“모든 국책사업 중 수도권권을 제외한 지방 각각의 **사업 권한**을 그 사업에 해당하는 **지자체로 이양**하여 추진” (정동일, 2018, 135쪽)

“- 중앙정부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 담당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부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광역발전위원회 설립

- 주요 기능 : 산업, 혁신, 교육 부문 지역발전정책의 기획, 관련 사업 및 예산 조정, 지역 발전사업의 평가와 효율화, 광역시·도 간 갈등관리 및 조정 등” (정동일, 2018, 142쪽)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위한 광역발전권 전략 연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의 분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한편, 관련 정책 보고서에서는 정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역 공동체의 역할, 시민 교육 등을 정책에서 자주 활용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광주비엔날레는 2017년 8월, 지역 작가 연구프로그램인 ‘작가 스튜디오 탐방’을 기획하였고 9월에는 ‘GB 토크’를 기획하여 시민들이 지역 예술가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²⁵⁾.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전달받는 시민들이 예술가와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 했다. 이는 대통령이 제시한 ‘권력의 이양’이나 ‘분배’가 실천되는 맥락이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소외된 자이를 주체화해 의미 있는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자기 배려가 정책과 접합하는 사회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광주가 도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의 민주화를 정책적으로 추구 및 실천하는 것은, 다양한 주체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실천적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만, 여전히 소외와 배제의 정치학은 광주 안에서 발견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의 지역들이지만 전당 건립 전까지 주목을 받지 못한, 동명동-양림동 일대는 하나의 예시이다. 특히, 동명동의 경우는 문화전당이 설립된 이후 문화전당과 연계되어 상업화가 활성화되었으나,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문제가 불거져서 지역민들이 이주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최근 광주가 문화와 관련된 담론을 생산할 때, 예외 없이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 두 사업이 국가적 사업인 동시에 광주의 대표

24) 출처: 성연철 (2022, 5, 10). [전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한겨레〉. Retrieved 4/23/23 from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042216.html>

25) 출처: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https://www.gwangjuennale.org/gb/education/gbtalks.do>)

적 문화산업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광주의 다른 문화기관들이 관련된 학술 및 정책 담론에서 이들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미미한 주목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광주가 '문화수도'로서 추구하는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이는 두 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장소들은 그저 '활용되는' 수준으로 기능함을 보여주는 한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이것은 광주가 과거 개발독재 국가가 제시했던 발전주의 모델을 하나의 진리나 지식으로 체화해 도시 공간을 구조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민인철(2019, 70쪽, 78쪽, 88-91쪽)은 재생사업에서 지역의 삶 자체가 되는 문화들이 활용 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벤트성 사업 대신 5.18 사적지를 활용하거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움직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국제도시'로 부상하려는 광주가, 지역 내에서 단순히 장소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산업을 피하고 있는 것은 삶과 문화, 그리고 발전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필요한 때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을 전시하기 이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해의 폭 안에는 타자화(他者化)된 주체와 삶의 문화들이 반드시 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 전향적인 방식으로 문화산업이 계획 및 시행된다면, 보다 성공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역민과 지역정부가 상상할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다. 따라서 그간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문화수도로 자리 잡아가는 광주는 이제 랜드마크나 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를 채워갈 콘텐츠와 스토리, 삶과 문화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숙고와 실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6. 결론을 대신하여

근간에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해온 광주는 과거부터 다양한 담론들이 경합해온 공간이었다. 1980년에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실천을 통해 정치적 저항의 담론이 생성된 도시였고, 1990년대부터는 중앙정부의 정책 담론이 투입되기 시작한 공간이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광주라는 공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광주비엔날레의 출범과 연결되는데, '광주비엔날레'의 출범은 중앙정부와 지역 예술가 간의 담론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었다. 특히, 통일미술제를 개최하며 중앙정부의 담론에 대항하던 지역 예술가들의 행위는 유의미한 대안적 담론의 특성을 보여주었으나,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침으로 휘발되거나 주류 담론에 통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비엔날레는 행사 준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성을 보이거나 정치

적 압력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 등의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비엔날레 이후 기획된 하향식(Top-Down) 문화산업이었다. 이 또한,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되어 문화관광부-광주광역시 문화정책실이 수직적인 방식으로 개입해 조직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구조적으로 집권 정당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것은 설계안을 두고 생긴 갈등이었다. 이는 ‘빛의 숲’이라는 설계안을 두고 빚어진 것으로, 환경단체, 중앙정부 및 시민단체들은 이에 찬성한 반면, 국제적인 랜드마크를 원했던 광주시와 광주시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일부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었다. 이 갈등은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와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찬성한 ‘빛의 숲’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례는 특정 공간이 개발과 정책의 대상이 될 때 나타나는 주체 간 갈등, 공간의 사사화(私事化) 현상의 일면을 보여준다. 과거 공적 공간의 변화 및 이의 전유의 과정에서 개별 주체들의 경험은 오늘날 경제 논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자화한 집단과의 과도한 경쟁과 대립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공간이 자본주의의 팽창과 재생산에서 ‘적극적인 계기를 통해 상품화되어 구(판)매하는, 또 투기(쟁)하는 대상이라는 하비(Harvey)의 주장과 맞닿는 지점이다(Crang & Thrift, 2000/2013, 297쪽). 결론적으로 광주의 문화산업은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한계를 노정하고, 광주와 관련된 학술 및 정책 담론 역시 두 곳의 문화산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광주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주목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보다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고정되는 담론의 권력화 문제를 드러낸다. 다시 말해, 국가에서 의제화한 문화산업은 ‘주류’ 문화산업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지역민들의 삶과 문화는 소수 담론으로 환원되는 담론 간 불균형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광주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주목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도시의 문화산업과 삶, 인간과 공간의 학제적 결합이다. 그간 광주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투자와 지원을 통해 문화인프라를 조성해왔고, 그 결과 현재 광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 물적 자원들이 일정 수준 충족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거대 문화시설과 등치된 문화를 일부 시민과 방문객이 제한적으로 향유하고 그것을 ‘문화도시’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즉, 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도시 공간의 활용 방식과 그 내용이다. 가령,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인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도시의 작은 장소들 및 지역(성), 다채로운 이야기들과의 연대와 관계 맺기를 통해 그 존재가치와 쓰임새, 저변

을 확장할 필요가 제기된다. 문화시설이 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문화공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자,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과 도시 공간의 조화와 화합을 통해 주체의 소외를 극복하는 실제적이며 상상적 대안의 계기가 될 수 있다.

References

- Adorno, T. W., & Horkheimer, M. (1947). *Dialektik der Aufklärung*. 김유동 (역) (2001). <계몽의 변증법>. 서울: 문학과 지성사.
- Ahn, Y. J., Roh, K. S. Lee, W. M., Lee, M. Y. Na, J. M., Lee, T. S. Kim, H. H., Jang, M. H., & Jo, J. K. (2014). *The geography of Gwangju in Korea*. Gwangju: Gwangju. [안영진·노경수·이왕무·이무용·나주몽·이태수·김회환·장문현·조정규 (2014). <한국지리지 광주광역시>. 광주: 광주광역시.]
- Choi, B. D. (2011). Neoliberal urbanization and projects of entrepreneurial city.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4(3), 263-285. [최병두 (2011).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권 3호, 263-285.]
- Choi, J. W. (1995). *Social science in May*. Seoul: Pulbit. [최정운 (1995). <오월의 사회과학>. 서울: 풀빛.]
- Choi, S. (2021, March 9). *S. Korean civic groups join forces to back fight against Myanmar coup*. The Korea Herald. Retrieved 3/5/23 from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0309000842&ACE_SEARCH=1
- Chun, M. Y. (2021). *Discourse analysis and discourse research*. Paju: Prunsasang. [전문영 (2021). <담론분석과 담론연구>. 파주: 푸른사상.]
- Chung, M. L. (2006). Gwangju as the cultural capital and 5 · 18.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6(1), 147-170. [정미라 (2006). 광주의 문화담론과 5 · 18. <민주주의와 인권>, 6권 1호, 147-170.]
- Crang, M., & Thrift, N. (2000). *Thinking space*. Routledge: London. 최병두 (역) (2013). <공간적 사유>. 서울: 에코리브르.
- Debord, G. (1992). *La societe du spectacle*. Gallimard: Paris. 유재홍 (역) (2014). <스펙타클의 사회>. 서울: 울력.
- Flew, T. (2019). From policy to curriculum: Drivers of the growth in creative industries courses in the UK and Australia. *Creative Industries Journal*, 12(2), 167-184.
- Foucault, M. (1970). *Orders of discourse*. Gallimard: Paris. 이정우 (역) (2014). <담론의 질서>. 서울: 중원문화.
- Garnham, N. (2005). From cultural to creative indus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1(1), 15-29.
- Harvey, D. (1990).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구동화·박영민 (역)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서울: 도서출판 한울.

- Harvey, D. (2000). *Space of hop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최병두 외 (역) (2001). <희망의 공간: 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서울: 도서출판 한울.
- Harvey, D. (2005). *Space of neoliberalization: Towards a theory of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Wiesbaden: Franz Steiner Verlag. 임동근 외 (역) (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지리적 불균등발전론>. 서울: 문화과학사.
- Hesmondhalgh, D., & Pratt, A. C. (2005) Cultural industries and cultural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1(1). 1-14.
- Hwang, S. H. (2019). A study on the ideology of Korea cultural policy sinc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Cultural democracy or democratization of culture?.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19(1), 69-98. [황설화 (2019). 김영삼 정부 이후 한국의 문화정책이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9권 1호, 69-98.]
- Jang, S. Y., & Ryu, J. S. (2010). Altérité et localité des villes entrepreneurs: Approche par le concept foucauldien de la gouvernementalité. *Journal of the Humanities*, 58, 883-928. [장세룡·류지석 (2010). 기업주의 도시 로컬리티의 타자성. <인문연구>, 58호, 883-928.]
- Jeong, D. I. (2018). Research on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for evenly prosperous regions. Seoul: Institute for Future Korea. Retrieved 3/10/23 from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B552531-201800013&menuNo=I0000002> [정동일 (2018).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위한 광역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 Kang, J. S.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through the cultural identity - The cultural exchange. *Korea Trade Exhibition Review*, 10(3), 71-91. [강준수 (2015). 문화정체성을 통한 전시컨벤션센터의 발전방안 고찰 -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무역전시연구>, 10권 3호, 71-91.]
- Kim, K. H. (2018). Towards a theory of glocal cultur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5), 1257-1268. [김기홍 (2018). 글로벌 문화이론에 대한 소고. <인문사회 21>, 9권 5호, 1257-1268.]
- Kim, O. J. (2001). *Biennale report*. Seoul: Dajiri. [김옥조 (2001). <비엔날레 리포트>. 서울: 다지리.]
- Kim, S. J. (2008, October 27). <Full text> *Presidential budget speech*. Newsis. Retrieved 5/13/23 fr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2347792?sid=100> [김선주 (2008, 10, 27). <전문>李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뉴시스>.]
- Kim, S. S. (2016, November 4). *Tightening the Biennale budget... Neglect of Gwangju cultural projects goes too far*. Jeonnam Ilbo. Retrieved 5/13/23 from <http://www.jnilbo.com/50984940387> [김성수 (2016,

- 11, 4). 비엔날레 예산 옥죄기... 도 넘은 광주문화사업 확대. <전남일보>.]
- Ko, S. (2022). A study on the discourse of Gwangju Design Biennale : Focusing on the exhibition catalog from 2005 to 2019.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고산 (2022).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답론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Kyunghyang shinmun (2013, November 18). *President Park Geun-hye's address to the National Assembly*. Kyunghyang shinmun. Retrieved 4/23/23 from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1311181109412> [경향신문 (2013, 11, 18).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문.]
- Lee, K. (2007). Questioning a neoliberal urban regeneration policy: The rhetoric of “cities of culture” and the city of Gwangju,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3(4), 335-347.
- Lee, K. H. (2006). Situating the multifaceted roles of discourse and the politics of discourse. *Media & Society*, 14(3), 106-145. [이기형 (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권 3호, 106-145.]
- Lee, S. J., & Jang, E. G. (2012) *The Korean cities of culture as regional development hub: A review of the first phase-projects and future directions*. Retrieved 3/30/23 from https://library.krihs.re.kr/dl_image/IMG/02/000000007090/SERVICE/000000007090_01.PDF [이순자·장은교 (2012). <지역거점 문화 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 및 향후과제>. 경기도: 국토연구원.]
- Lee, Y. B. (2014). The effects of convention center service scape and urban image on the behaviour intention: Focused on the of visitors in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8(12), 61-73. [이영빈 (2014). 컨벤션센터의 서비스스케이프와 도시이미지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8권 12호, 61-73.]
- Lee, Y. J. (2011). Cultural policy for creating small cultural contents in the era of large cultural industries. In W. J. Ryoo, S. M. Kang, & Y. J. Lee (Eds.), *Making a small culture*. Paju: Hanul. [이영주 (2011). 거대 문화산업시대의 작은 문화콘텐츠 만들기를 위한 문화정책. 류용재, 강승묵, 이영주 (편), <작은 문화콘텐츠 만들기>. 파주: 도서출판 한울.]
- Ma, D. H. (1997). ‘Power’ in cultural stud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Conference, 233-244. [마동훈 (1997). 문화연구에서의 ‘권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33-244.]
- Mills, S. (2003). *Michel Foucault*. Routledge. 임경규 (역) (2008).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 서울: LP.
- Min, I. C. (2019). *Suggestions for policy directions of cultural regeneration in Gwangju City*. Retrieved 3/11/23 from https://www.jni.re.kr/cms/bbs/cms.php?dk_cms=rreport_01&dk_id=7 [민인철 (2019).

<광주지역 문화재생사업 현황 분석 및 미래 정책방향>. 나주: 광주전남연구원.]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 2020 Hub City of Asian Culture White Paper. Retrieved 3/10/23 from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1_UMO20211242364&kwd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21). <20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esidential Archives (2003). *President Roh Moo-hyun's inauguration speech*. Retrieved 4/21/23 from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inauguration/president16.jsp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2003).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esidential Archives (2008). *President Lee Myung-bak's inauguration speech*. Retrieved 4/21/23 from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inauguration/president17.jsp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2008).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esidential Archives (2013). *President Park Geun-hye's inauguration speech*. Retrieved 4/21/23 from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inauguration/president18.jsp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2013).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Moon, H. J. (2022). A study on the commercial gentrification of the urban center of Dongmyeong-dong in Gwangju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문홍주 (2022). <광주 광역시 동명동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Na, Y. B. (2018). Study on the influence that the promotion of policy pursuing human city has on community, city brand and resident happ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나윤빈 (2018). <인문도시 지향 정책추진이 지역사회, 도시브랜드,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Oksala, J. (2007). *How to read Foucault*. London: Granta Publications. 홍은영 (역) (2008). <How to Read 푸코>. 서울: 웅진씽크빅.

Park, C. H. (2019, January 10). *Agricultural standards have also been moved... Gwangju-Jeonnam Innovation City's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finished.'* Yonhap News. Retrieved 5/13/23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0149200054?input=1195m>

[박철홍 (2019, 1, 10). 농기평도 옮겨 왔다...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마침표'. <연합뉴스>.]

Park, K. T., Park, K. H., Rhee, M. S., Lee, S. B., & Ha, Y. S. (2017). *Locality and postmodern spatiality*. Seoul: Somyung. [박규택·박경환·이명수·이상봉·하용삼 (2017). <로컬리티와 포스트모던 공간성>.

서울: 소명출판.]

Park, Y. (2020, April 7). *Global project 'MaytoDay' to remembering Gwangju Democratic Uprising to*

launch in May. The Korea Herald. Retrieved 3/6/23 from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00406000826&ACE_SEARCH=1

- Park, Y. W. (2015). Gwangju Biennale 1995-2014. Retrieved 3/11/23 from <https://www.gwangjubennale.org/gb/Board/9302/detailView.do> [박양우 (2015). <광주비엔날레 1995-2014>. 광주: (재) 광주비엔날레.]
- Roh Moo-hyun Archives (2003). *2003 president-elect Roh Moo-hyun's new year's address*. Retrieved 4/21/23 from <https://archives.knowhow.or.kr/record/all/view/2046905> [노무현 사료관 (2003).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신년사.]
- Seo, S. B. (2004). A study on the issues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cultural capital in Gwangju.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16(2), 313-332. [서순복 (2004). 문화수도론의 쟁점과 정치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6권 2호, 313-332.]
- Seo, T. S., Lee, W. S., Jeong O. J., Kang, H. J., Lim, S. Y., Park, J. E. et al. (2006). Policy guidelines for regionalizat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Retrieved 3/30/23 from <https://www.kdevelopedia.org/Resources/view/05201308070127666.do> [서태성·이원섭·정옥주·강호제·임상연·박정은 외 (2006).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방화를 위한 대응과제>. 경기: 국토연구원.]
- Seong, K. R. (2013). Political dynamics of regional inequality and an analysis of regional polices -A comparison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the Rhee Myung-Bak government. *Korean Regional Sociology*, 14(2), 5-45. [성경룡 (2013). 지역불평등의 정치동학과 지역정책 분석-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 <지역사회학>, 14권 2호, 5-45.]
- Seong, Y. C. (2022, May 10). [Full text] *President Moon Jae-in's inauguration speech*. Hankyoreh. Retrieved 4/23/23 from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042216.html> [성연철 (2022, 5, 10). [전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한겨레>.]
- Shin, H. R. (2022). *Who governs the city*. Seoul: Imagine. [신혜란 (2022). <누가 도시를 통치하는가: 어느 문화 도시가 들려준 도시 정치 이야기>. 서울: 이매진.]
- Song, E. Y. (2014). Governmentality, population and city in Park Chunghee Era. *Journal of Korean Modern Literature*, 52, 35-65. [송은영 (2014).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 인구, 도시. <현대문학의 연구>, 52호, 35-65.]
- Song, H. I. (2016, November 14). *Jang-Hyun Yoon "Vice minister Kim Jong called due to the unavailability of the Sewol May Exhibition."* Korea Economic Daily. Retrieved 3/12/23 from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6111452308> [송형일 (2016, 11, 14). 윤장현 “세월호 전시 불가 배경에 김종

차관 전화'. <한국경제>.]

- Song, J. H. (2020). The 2nd Gwangju Metropolitan City's mid- to long-term comprehensive plan for culture and arts. Retrieved 3/30/23 from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6290000-202100008&menuNo=I0000002> [송진희 (2020). <제2차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 모두를 위한 예술 선도적 문화창조로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 광주>. 광주: 광주광역시.]
- Yang, Y. S. (2017). 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the Guggenheim Effect in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Korea Culture Industry*, 17(4), 43-52. [양윤서 (2017). 도시재생 측면에서 본 구겐하임 효과의 한계성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7권 4호, 43-52.]
- Yoon, Y. J., & Ryoo, W. J. (2014). The political economy of local creative industries – Focusing on the Gwangju Hub City of Asian Culture –.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Traditional Dance*, 27, 157-198. [윤연주·류용재 (2014).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치경제학: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우리춤과 과학기술>, 27집, 157-198.]

최초 투고일 2023년 07월 28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22일

논문 수정일 2023년 11월 25일